

CHUNGBUK
THE CENTER OF KOREA



2024.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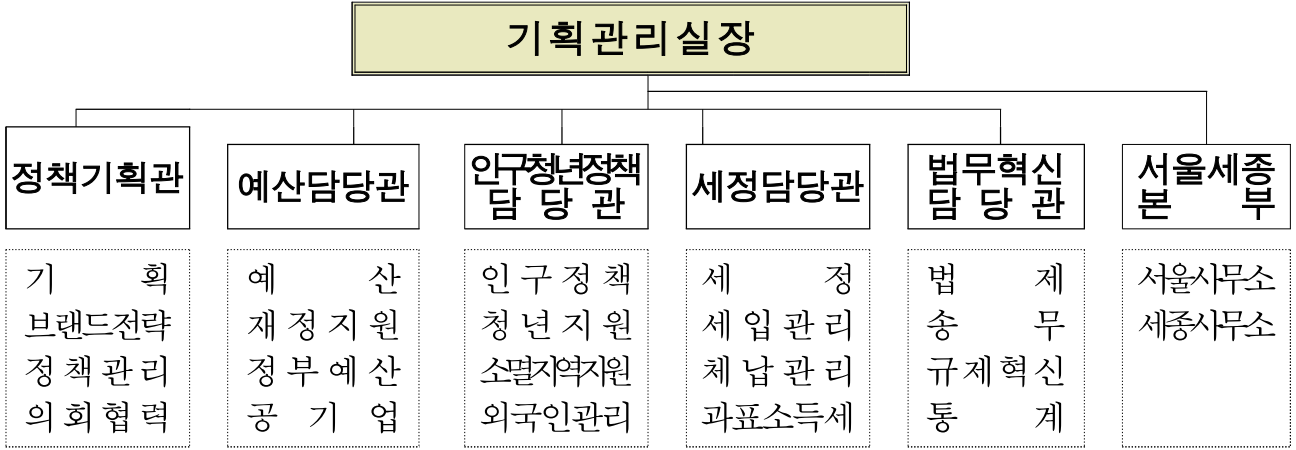
기획관리실

목 차

| | |
|---------------------------------|----|
| I. 일반현황 | 1 |
| II.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 4 |
| III.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 6 |
| IV.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 7 |
| 1.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기획 | 7 |
|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12 |
| 3.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총북 | 17 |
| 4.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 22 |
| 5.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27 |
| V. 주요 현안사업 | 32 |
| VI.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36 |
| VII.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 38 |
| VIII.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 41 |
| IX.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 | 49 |

I. 일반현황

1 조직 :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1 본부, 20 팀 · 2 사무소



2 정·현원 (’24년 1월 기준)

| 구분 | 정원 | 현원 | 비고 |
|-----------|-----|-----|----|
| 계 | 116 | 115 | |
| 정책기획관 | 27 | 26 | |
| 예산담당관 | 25 | 25 | |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19 | 19 | |
| 세정담당관 | 20 | 20 | |
| 법무혁신담당관 | 20 | 20 | |
| 서울세종본부 | 5 | 5 | |

3 예산현황 (’24년 1월 기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 합계 | 906,301 | 906,301 | 0 |
| 정책기획관 | 7,793 | 7,793 | |
| 예산담당관 | 211,885 | 211,885 | |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41,457 | 41,457 | |
| 세정담당관 | 643,442 | 643,442 | |
| 법무혁신담당관 | 1,038 | 1,038 | |
| 서울세종본부 | 686 | 686 | |

4 주요 사무

| 실·과명 | | 주요기능 |
|---------|--------|---|
| 정책기획관 | 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중앙정부 정책 대응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관리 |
| | 브랜드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 정책 브랜드 전략 기획 및 홍보 충북 대표 브랜드(BI, CI) 성장 로드맵 수립 |
| | 정책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연구용역·충북연구원 활성화 지원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
| | 의회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의회 협력 사무 및 도의회 부의안건 처리 대집행기관 질문, 5분 발언 및 건의·결의문 등 후속조치 관리 |
| 예산담당관 | 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전망 및 예산 편성·운용 주요 재정제도 운영 및 쟁점사항 재정합의·조정 |
| | 재정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운영, 신속집행 관리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운영 |
| | 정부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예산 확보 종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건의자료 작성 총괄 |
| | 공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운영지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금·지방채 관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
|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출산육아수당 등 임신·출산 장려 지원사업 발굴, 추진 |
| | 청년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행, 청년 참여·소통 지원 청년일자리 발굴, 청년 생활자립지원 등 |
| | 소멸지역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문제·저출생 인식개선 문화 확산 지원 등 |
| | 외국인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실태조사 및 생활안내 등 |
| 세정담당관 | 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정 종합운영 및 징수목표 관리 신세원 발굴 및 도세 부과·징수·감면 운영 |
| | 세입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운영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결산 등 세입금 관리 |
| | 체납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납세편의 운영 지방세 세무조사(정기, 기획) 운영 |
| | 과표소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 과표 및 지방소득세 운영 지방세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운영 |

| 실·과명 | | 주요기능 |
|-------------|-------|--|
| 법무혁신 담당관 | 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입법안 검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등)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대면·사이버·이동) |
| | 송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민사소송 수행 ◦ 지방세납세자 보호관 |
| | 규제혁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 ◦ 도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과제(사례) 발굴·관리 |
| | 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통계의 심사·분석 및 공표 |
| 서울세종 본부 | 서울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예산 확보 지원, 국회 및 서울소재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추진 ◦ 충북출신 인사 업무협조 및 사무연락 |
| | 세종사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예산 확보 지원 및 세종소재 중앙부처 대외협력 업무추진 ◦ 충북출신 인사 업무협조 및 사무연락 |

5 출자·출연기관

| 구분 | 충북연구원 | 충북개발공사 |
|--------|-----------------------------|---------------------------------------|
| 설립일 | 1990. 5. 15. | 2006. 1. 16. |
| 설립목적 | 도정 현안의 체계적 조사분석 및 대안 연구 |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활성화 촉진 도모 |
| 자본(기금) | 21.7억원 | 1,602억원 |
| 기구(인력) | 원장, 1실, 4부, 2분원 (46명) | 사장, 본부장, 3실, 4처 2부, 1단 (93명) |

II. 2023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 미래 100년을 이끌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기반 마련 >>

-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제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 및 위상 제고
* 국가등의 책무, 발전종합계획 수립의무 부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행재정적 지원, 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관련 특례 등
- (충북의 새 이름(BI), 새 얼굴(CI) 선포) 새로운 충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충북도의 비전과 정체성을 찾아 「새 이름(BI) ‘중심에 서다’, 새 얼굴(CI) ‘춌’(❁)」을 선포

<< 전략적 재정 및 세정운영 >>

- (최대 정부예산 확보) '24년 정부예산 도정 사상 최대규모 반영
- '24년 정부예산 8조 8,296억원(전년대비 5,231억원, 6.3% 증가)
※ 연도별 확보규모 : ('21)68,202 → ('22)76,703 → ('23)83,065 ⇨ ('24)88,296억원
- (자주재원 확충) 안정적 재원확보 및 숨은 세원 발굴^(11월말 기준)
- 지방세 : 17,319억원 징수(목표 1조 7,207억원 대비 100.7%)
- 세외수입 : 1,352억원 징수(목표 1,293억원 대비 104.6%)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 166억원(목표대비 181.3%)
- (이자수입 증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운영으로 이자수입 창출(118억원)

<< 저출생·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 구축 >>

-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운영
- 전담부서 신설(1월), 인구위기대응TF 및 자문위원회 구성(3월)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만들기’ 범도민협의회 구성(7월)
- (전국 출생아 증가율 1위)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 충북 출산육아수당 시행(5월), 임신부 예우조례 제정(12월)
- 전국최초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8월),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등

2 성과에 대한 평가

《 도정책신·성과 도민 체감을 통한 정책추진동력 강화 필요》

- (중부내륙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지원, 문화·관광·환경, 균형 발전, 첨단산업 등 분야별 특례 등 추가발굴을 통한 개정안 반영을 위한 도민 역량결집 및 정책추진동력 필요
 - (성장하는 충청북도의 미래비전 구현)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을 향해 성장하는 충북도의 미래 비전 구현을 위해 새로운 대표 브랜드 홍보 기반 마련, 확산 필요
- ⇒ 체감형 정책수립과 자긍심 제고로 도민의 정책참여도를 높여 속도감 있는 도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정책동력으로 전환 필요

《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고강도 대응 필요 》

- (지방재정 악화) 국내경기 불황 지속과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지방교부세, 취득세 감소 등 대규모 세수 결손 예상
 - (재정소요 확대)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 및 미래전략사업 재정수요↑
- ⇒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고강도 재정혁신과 적극적 징수노력 필요

《 ‘대한민국 인구정책 선도’ 실현을 위한 시책 발굴 필요 》

- (출생률) 출산육아수당 영향 등으로 전국 유일 출생아수 반등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출생률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마련 요구
* '22년 합계출산율 0.87명 ('21년 대비 증감율 14위) → '23년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
 - (인구유입) 도내 인구 순유입은 증가하나, 인구감소지역·청년 인구 유출은 여전히 발생 ※ '23.11월 도내 순유입 +3,917명, 전년비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인구 △2,694명
- ⇒ 출생률 제고로 자연감소를 최소화하고 인구유입 확대 시책 발굴 필요

Ⅲ. 202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도민이 체감하고 함께하는 '중심 충북' 구현

전략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기획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이행
과제

1. 선제적
정책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

1.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

1.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

1. 차질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1.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

2. 충북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2.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착
촉진

2.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

2.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
및 적극적
소송수행

3.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

3.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

3.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3.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3.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규제개혁·
도정혁신 추진

4.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도민
행복 체감
향상

4.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4. 충북형
외국인
정책으로
생산가능
인구 증가

4. 균형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

4.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

IV.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1.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기획

추진여건

- 최초의 충북 발전지원 특별법인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25년만의 충북 BI, CI 변경, 역대 최대 정부 예산 확보 및 대규모 투자 유치, 출생아수 증가율 전국 1위 등 대대적인 혁신 노력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중심 충북」 구현을 위한 정책추진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도민 정책공감 필요성 대두
 - (정책 체감도 강화) 정책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연계 사업발굴, 공약 및 정책성과 구체화 로드맵 제시 등
 - (정책 속도감 제고) 도정 난제 해결 key 제시, 중앙-국회 연계를 통한 도정 현안 추진속도 제고 등 정책 속도감 향상 방안 제시
- 정책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용·반영하고, 정책체감도를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현안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 필요



이행과제

- ① 선제적 정책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
- ② 충북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③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
- ④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도민 행복체감 향상

1 선제적 정책기획을 통한 도민 정책체감 제고

1-1.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기획 및 추진

□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정책체감을 위한 구체화 추진 ^{현안}

- (법안 개정) 특별법 개정안 마련('24.上) 등 법령 정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제 발굴 및 부처 협의('24.上)
- (협약체 구성) 공동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중부내륙 특별법 협약체 구성(8개 시도) 및 운영계획 수립('24.上 구성, 下 출범)
- (선도사업 발굴) 선도사업 발굴*(공통, 시도별) 및 협의('24.上), 추진 계획 수립 및 국가계획 반영 건의('24.下)
* 6대 분야 중점 연계협력사업 추진(인구, 환경, SOC연결망, 문화·관광, 신성장, 규제)

□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 ^{현안}

- (거버넌스 운영)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초광역 협력기구 구성
- 충청권 특자체 합동추진단 운영 / 1단 3과 9팀 37명(세종시 직제)
- 존속기한 : 2024. 1. ~ 12. ※ 기존 2023. 1. ~ 12.에서 1년 연장
* '24년도 소요예산 : 205백만원(총사업비 8.2억원, 4개 시도 분담)
- (주요역할)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24. 7월) 준비, 위임·이관사무 발굴

1-2. 충북의 내·외적 성장 모멘텀 마련

□ 선제적 도정운영과 현안 해결로 내적 성장 주도

- (선제적 도정운영)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한 업무계획 수립^(하반기) 및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공유·소통 기회^(연중) 마련
- (체계적 현안대응) 체계적 현안관리와 논리개발로 정부·국회와 적극 소통^(연중)하고 현안해결을 위한 부서협력 및 조정 지원^(연중)
-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 건의활동 등

□ 대외 연대·협력을 통한 외적 성장 주도

- (연대 및 협력)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활용한 충북 발전정책의 지자체 공동의제화 추진 및 대정부 건의활동 주도를 통해 충북 위상강화^(연중)
- (네트워크 강화) 서울세종본부 중심의 적극적 대외 동향 파악·대응^(연중)

2 '충북브랜드' 확산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1. '충북브랜드' 대내·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충북브랜딩 체계화로 인지도 제고

- (로드맵 수립) 대표 브랜드(BI, CI) 연차별 성장 계획 설정·활용방안 개발
 - * 인지도 확보(도입기/24) → 선호도 향상(정착기/25) → 지속 가능성 확립(확산기/26)
- (내부 브랜딩 강화) 내부 직원의 브랜드가치에 대한 이해·공감도 제고
 - * 매뉴얼 제작·확산(브로슈어, 온라인 매뉴얼 등), 브랜드 활용 가이드 등
- (외부 브랜딩 확산) 부서별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홍보 추진
 - * 부서별 행사·축제·홍보시설물·미디어(SNS, 유튜브 등) 활용 선제적 홍보

□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충북브랜드' 공감대 형성

- (홍보물 제작) 브랜드 홍보 굿즈, 영상, 디지털 콘텐츠 등 제작 홍보
- (소통 캐릭터·이모티콘 개발[☞]) 브랜드 활용 캐릭터·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
- (국민 아이디어 공모) 관광,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 활용 방안 모색
- (정책디자인 개발·지원) 주요 정책 홍보 디자인·콘텐츠 개발 및 확산

2-2. 도민 소통을 통한 '충북브랜드' 확산

□ 소통과 협력을 통한 충북브랜드 확산

- (브랜드자문단) 다양한 전문가·도민 참여로 효율적·체계적 브랜드 관리·홍보
- (청년브랜드참여단)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콘텐츠 발굴·육성
-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창업 등 민·관 공동브랜딩으로 브랜드 확산 및 파트너스 기업과의 동반성장 도모
- (스마트홍보관 활성화[☞]) 산업장려관 내 투명 OLED 홍보 패널에 키오스크 프로그램 도입, 쌍방향 도민 소통 창구로 확대

3 체감·혁신 도정을 이끌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

3-1. 정책수요 능동적 대응 및 도민중심 체감·소통 행정

□ 새로운 환경변화·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

- (충북연구원 협력·지원)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 제시
* 도정현안 이슈 페이퍼^{매주}, 정책동향 분석^{매주}(중앙·지방 정책이슈 및 정부 공모사업) 등
- (연구원 활용성 강화^{신규}) 국정이슈·기술변화 대응 도정 신규정책 발굴
* 道-연구원간 정기적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매월}, 정책세미나^{반기} 등 발굴채널 다각화
- (정책연구용역 관리) 정책 논리개발 및 현안대응 등의 연구활동 지원

□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 (이행률 제고)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자체평가^(1회)로 공약 추진동력 강화
- (평가위원회)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개최^(전체회의·소위원회) 및 대도민 공개를 통한 공약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협력과 소통 중심의 정책자문단·위원회 운영

- (정책자문단) 주요현안 자문^(분과별), 도민 중심의 도정 정책과제 연구 등
* 10개 분과, 100명 위원
- (위원회)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 실태점검^(분기)·정비를 통한 효율적 운영

3-2.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을 위한 전략적 대응

□ 2025년('24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 (전략적 대응) 대응계획 수립^(3월), 실적 점검^(매월) 및 추진상황 보고회^(5회)
- (기술적 지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회) 및 디자인 컨설팅^(12월) 지원

□ 평가실적 향상 및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운영

- (대응전략 수립) 정부합동평가 연계 및 국·도정 성과 제고방안 마련^(4월)
- (평가 및 환류) 우수 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원^(4~11월), 도·시군 우수시책 성과공유회 개최^(하반기)를 통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

4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강화로 도민 행복체감 향상

4-1. 맞춤형 회기 운영 지원 및 의회의 도민 체감 정책 제안 관리

- **적시 업무추진을 위한 맞춤형 회기 운영 지원(정례회 2회 임시회)**
 - (맞춤형 안건 제출)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 예산·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도정현안과 회기운영일정에 맞는 시의성 있는 안건 제출
 - (안건처리 적극 협의) 전문위원 사전협의제 및 간담회 등 통해 사전 설명 및 협의 확행,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류 실시
- **의회의 도민 체감 정책 제안 관리 및 도정 반영 지원**
 - (도민 체감 정책 제안 관리) 대집행기관 질문,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상황 정기 검토(연 3회)로 도민 체감 정책 반영 현황 관리
 - (자료 제공) 서면질문, 서류제출 요구(수시)에 대한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 **도정과 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여건 조성**
 - (도민 의견 수렴) 도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적극 참여
 - (현장방문 지원) 상임위, 특위 등 사업장 점검 방문 시 안내, 자료 제공 등 적극 지원

4-2. 도의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로 현안 해결 공동 대응

- **도정 현안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
 - (정책간담회) 도지사·의장단·상임위원장단 등 간담회를 통한 수시 교류로 도정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현안해결 공동대응) 대외적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한 집행기관·의회 공동 대응
- **도의회·집행부 간 상시 교류·소통을 통한 유기적 협력 강화**
 - (교류·소통 채널 강화)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위원회별 주요 도정에 대한 수시 보고, 간담회 등 정보교류로 의회·집행부 간 상시 소통강화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추진여건

-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재정 강화’로 전면 전환
 -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 가시화
 - 호우피해 복구 및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과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정부 정책방향과 함께하고 민선 8기 현안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필요**



이행과제

- ①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자원배분**
- ②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 ③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
- ④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①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자원배분

1-1. 책임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 재정의 건전성 제고

- (세출예산 효율화) 모든 투자사업 원점(Zero-Base)에서 지속 재검토
- 불요불급한 예산, 성과부진사업 폐지 등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
→ 절감재원은 재난안전, 지역경제 회복, 미래 도약사업에 집중투자

□ 성과중심 재정운용

- (재정성과 실효성 제고) 재정사업 평가 및 환류 기능 강화, 지방 보조금·행사축제성 사업 총액한도제 운영
- 성과평가 결과 후 차년도 예산 삭감 등 패널티 적용
- (성과예산 운용)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내실있는 운영

1-2. 수요자 중심 투명한 예산운용

□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및 도민제안 인센티브 지급 등 도민 참여 활성화
- (투명한 재정운용) 도민입장 관심항목 재정공시(예산공시 2월, 결산공시 8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로 재정 투명성 제고

□ 수요자 중심 예산운용

- (성인지예산) 양성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
- 성인지 예산서 분석용역 추진(중점관리사업 집중 모니터링)
- (찾아가는 예산컨설팅) 수요중심 맞춤형 예산 컨설팅 확대 운영
- 직속기관·사업소 1기관 1방문 추진(현장 애로사항 의견 청취)

2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2-1.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

- (보통교부세) 지역균형 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 건의 및 도·시군 전략회의 개최(수시)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재난안전수요 등 사업 지속 발굴·반영
 -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4회)

□ 효율적 지특회계 및 전환사업 운영

- (지특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운영
- (전환사업)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전환사업 운영
 - (1단계) 국비보조사업(19년 전환) 국비규모 기준 39개 사업 1,480억원
 - (2단계) 국비보조사업(21년 전환) 국비규모 기준 41개 사업 834억원

2-2. 건전성 제고 및 재정효과 극대화

□ 사전심사 강화를 통한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를 통한 재정낭비 최소화(연 4회)
- (지방재정영향평가) 정부부처 공모사업 사전점검을 통하여 지방재정운용 효율화 추구
-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6회)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2025년~2029년(5년간) 연동화 계획 수립(8월~10월)

□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석·진단 및 위기관리

- (재정분석)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 분석
 - 3개 분야(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14개 지표
- (재정위기사istem) 5개 분야 6개 지표의 사전점검(분기별)으로 재정위기 선제적 대응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적극 집행

- (적극집행) 상반기 65% 이상, 하반기 92% 이상 목표
- (소비투자) 분기별 4회(43개 예산통계목 중 목표설정액의 105% 이상)

3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8조9천억원)

3-1. 민선8기 도약을 위한 신규 및 현안사업 발굴·반영

□ 정부정책에 부합한 분야별 신규사업 발굴

- (효과적 발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업무계획 분석(26개 부처)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방향 설정 및 지자체 벤치마킹(16개 시도) 실시
- (분야별 발굴) 道 미래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및 정부정책방향(국가전략기술, 신성장 관련사업 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 최대 반영

- (부처 최대반영) 국정과제, 대통령공약, 정부정책과 연계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건의 및 반영 추진
- (지역 인적자원 활용)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도·시군 공조 체제 강화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최대 반영 추진

3-2. 기재부 심의 대응시스템 강화 및 국회 추가 반영

□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재부 심의 대응

- (적기대응) 기재부 심의(6~8월) 단계별 대응 계획수립 및 대응 활동 추진으로 미반영사업 반영 및 반영사업 삭감 방지
- (선택과 집중) 분야별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의 활동 추진

□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한 국회 추가 반영

- (공조강화) 지역구 국회의원(8명) 및 충북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와 수시 방문 건의를 통한 지역 주요 사업 반영
- (핵심공략)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국회의원 집중 설명·건의를 통한 국회 추가 증액

4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

4-1.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 유도로 경영성과 지속 제고

□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동반 강화

- (공익 실현) 경영평가(2~8월)를 통해 ESG 경영원칙 및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9월)로 책임성·투명성 제고
* (평가대상) 행안부 주관 4개(공사,공단), 도 주관 7개(시군 하수도)
- (재무건전성 강화) 공사 재무현황 등 통합경영 공시(6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부채중점관리 계획 수립(9월), 적정 부채비율(200%) 관리

□ 출연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 및 직무중심 인사관리 추진

- (경영평가) 출연기관 공공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 실시(2~8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조정 등 환류를 통한 책임경영 확립
* (평가대상) 총 13개 출연기관 중 10개 기관(개별법에 의한 평가기관 제외) 및 9개 기관장(공무원 겸직 기관장 제외)
- (직무중심 인사관리) 단계적 도입을 통한 공정한 인사관리 제도 운영

4-2. 안정적인 재무관리 및 기금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철저한 부채관리로 적정 채무비율 유지

- (관리체계) 내실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채무비율 지속 관리
*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75% ('22년 결산 기준, 25% 초과 '주의', 40% 초과 '위기')

□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 및 여유자금의 적시 활용

- (성과관리) 기금운용 성과분석(7~11월), 수입 징수내역 관리(매월)
* (도에서 운용 중인 기금) 총 15개 기금(법정기금 4개 포함)
- (자금활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비율 확대 및 지역개발기금 포괄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 도모

3. 인구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추진여건

- 출산육아수당 효과로 도내 출생아수 반등 등 인구위기 극복의 단초가 마련됨에 따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과감한 사업추진 요구
 -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정책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책 필요
 -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주도 지방소멸 문제 대응 역량 요구
 - 정부의 비자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본격 추진 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
- **결혼, 임신·출산, 다자녀 우대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출산장려 정책과 청년정책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우수 외국인 유입정책을 통한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 구현**



이행과제

- 1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률 제고**
- 2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정착 촉진**
- 3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 4 **충북형 외국인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

1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출생을 제고

1-1.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 및 도민참여 확대

□ 체계적인 인구 종합대책 추진

- (인구정책 수립) 제1차 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한 '24년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위원회) 인구정책 조정 및 심의를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25명)

□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 (기념행사) 인구의 날 기념식(7월), 임산부의 날 기념식(10월)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방안 모색
- (충북인구포럼)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및 대안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7월)

1-2.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

□ 출산가정 육아기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육아수당^{공약}) 출산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출생 첫 해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

□ 즐겁하고 두터운 임신·출산 친화사업 확대

- (임신출산 사업 확대) 임산부 안심출산을 위한 산후조리비(50만원)^{신규},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50만원)^{신규}
- (난자냉동 시술비 등)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임신성공률 제고를 위한 난자냉동 시술(200만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2회, 회차당 100만원)^{신규}

1-3. 인구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시군 정책참여 유도

□ 인구구조변화 대응 네트워크 구성

- (인구위기대응TF 등) 인구정책 발굴 및 기관·부서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위기대응TF 및 실무대책반 운영
 - 인구정책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간담회 추진

□ 저출생 대응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 (우수시군 선정) 저출생 위기극복 및 인구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인구정책 시군 평가 및 우수시군 포상(3개 시군, 6억)
- (공모사업) 정부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2 다양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 정착 촉진

2-1. 청년 참여·소통 활성화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청년 종합대책 추진

- (청년참여확대)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에 따른 청년위원 위촉 비율 확대
- (청년정책수립)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권리·참여 등 청년의 삶 종합 지원을 위한 '24년 시행계획 수립

□ 청년 주도적 활동 지원 및 소통·홍보 강화

- (청년축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 운영 및 개최
- (청년희망센터) 청년광장, 청년학교, 서포터즈기자단 등 청년 중심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청년 소통·교류 거점 공간 운영
- (소통창구운영) 청년포털 운영, 청년정책 책자 발간, 소통간담회 추진 등

2-2.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인구 유입

□ 지역 청년 친화 일자리 육성

- (지역특화일자리) 지역혁신형(16개) 및 지역정착지원형(14개), 상생기반대응형(3개)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 지역 정착 도모
- (맞춤형 고용지원) 기업초청 토크콘서트(2회), 레벨업 지원(40팀) 등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 진출 지원

□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초기 창업기반 마련

- (창업응원금지원^{공역}) 창업 7년 이내 청년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1,000명, 30만원)
- (사업화지원) 창업 5년 이내 기업 창업활동비 맞춤형지원(8개 업체)

2-3. 청년근로자 자립기반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 (행복결혼공제) 미혼청년 목돈 마련 지원으로 결혼·출산장려 및 근로자 근속유지·청년농업인 육성(1,350명)
- (월세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 도모(1,700명, 월 20만원)
- (재직청년근속장려금)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160명, 월 30만원)

3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3-1.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방안 구축

-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24년 시행계획 마련
 - (투자계획) 광역·기초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25년 투자계획 수립
- **지방소멸 해소에 기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실시**
 - (광역계정^{현안}) 속리산 솔빛 위케이션 센터 건립 등 96억(10개 사업, 6개 시군)
 - (기초계정^{현안}) 청년 정책 거점화 사업 등 464억(19개 사업, 6개 시군)
- **우수사례 발굴 및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인구감소 방안 마련**
 - (우수사례)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로 인구감소 대응
 - (공모추진) 인구감소지역 관련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 및 지원

3-2. 주민 참여형 사업추진을 통한 인구문제 관련 도민 관심 촉구

- **가족 친화 기업 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생명 존중 가치관 확립**
 -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육아 병행 지원 컨설팅(20개사) 및 프로그램(4회)
 - (생명지킴이 사업 추진) 생명존중 교육(18회), 생명사랑 캠페인(2회)
- **인식개선을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및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
 - (도민 인식개선) 인구문제 및 저출산 극복 순회 교육(65회/2,280명)
 - (저출산 인식개선) 아빠육아 참여 유도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 운영(8회)

3-3. 인구감소 대응 및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 추진

- **도민 수요 맞춤형 사업 실시 및 임신, 출산 관련 통합플랫폼 운영**
 -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신규}) 인구감소지역 임신부 맞춤형 여행패키지 제공(300명)
 - (가치자람 플랫폼 운영)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맞춤형 사업 안내 및 신청 서비스 제공

4] **충북형 외국인정책으로 생산가능인구 증가**

4-1.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외국인정책 수립

□ **외국인 정책의 다양성·포용성**

-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4년 지원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15명)

□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외국인 통계 데이터 관리**

- (통계분석) 국적별·지역별 체류외국인 지표 관리 및 분석(2회)

4-2. 맞춤형 외국인 유치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 **선제적인 지원으로 우수 외국인력 확보**

- (우수 고용기업 지원^{신규})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고용 우수 중소기업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1억원)
- (취업 지원^{신규}) 외국인재 유입·정착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1회)
-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인 체류특례 부여(6개 시군)

□ **수요기반 맞춤형 정착 지원**

- (정착지원 공모^{신규}) 외국인주민의 지역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40백만원)

4-3. 외국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통합 강화

□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네트워크) 외국인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및 정책홍보 등
- (중앙협력)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이민정책 제도개선 건의

□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 (포상) 사기진작을 위한 외국인 지원 유공자 표창

4.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추진여건

- 경제여건은 개선되지만, 회복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시장도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복잡·급변하는 납세환경으로 인해, 권리구제 요청이 증가하는 만큼 과세품질을 높이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정운영 필요
- **지방세입 징수 강화, 과표의 합리적 산정 및 신세원 발굴, 체납액 전략적 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자권리 및 납세편의 제고로 공감세정 운영 필요**



이행과제

- 1 **차질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 2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
- 3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4 **균형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

1 차질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

1-1.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

□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성공적 징수목표 달성(1조 7,629억원)

- (체계적 분석·전망) 세수 변동요인, 징수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으로 세입상황 적기 대응(수시)
- (감면 확대 지양) 재원확보 대책없는 비과세·감면 확대 제한으로 내실있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비과세·감면율 13% 이하, 연중)
- (환급금 최소화) 고액환급금(5천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자문 실시로 효율적인 세수 관리(연중)
- (촘촘한 세원 관리) 면밀한 취득세 부과상황 및 운영 지도로 세원누락 방지(상반기)

□ 지방세입 확충 강화

- (세수확보 자체노력^{신규})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인상으로 세수증대 기여(조례 개정)
- (우수 시·군 포상)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및 우수시군 포상으로 동기부여 및 징수율 제고(상반기)

1-2.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납세서비스 제공

□ 성실납세 인식제고와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 추진

-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신규}) 미래 납세자인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지방세 교육과 홍보로 성실 납세 기반 조성(연3회)
- (충북세정포럼 개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세제 개선방안 제시 및 공감대 확산 기회 마련(연1회)
- (마을세무사 운영) 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기회 제공(연중, 마을세무사 30명)

□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

- (세정 연찬회 개최) 지방세제 개선 연구과제 발표 및 업무 정보 공유의 장 마련(연1회)
-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관계법 개정 사항 및 세목별 직무교육(수시)

2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금 관리 강화

2-1.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 강화

□ 철저한 세입금 관리로 재정정책 기반 마련

- (세입결산 추진) 정확한 세입금 결산 추진으로 세입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재정정책 방향 제시(상반기)
- (세외수입 통계) 세입결산에 따른 세외수입 통계 작성으로 세외수입 연구 및 정책 발굴의 기초자료 제공(6월~10월)

□ 정확하고 신속한 세입금 관리 강화

- (정확성 제고) 전자납부고지서 사용으로 세입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중 수납 및 세입금 과목오류 발생 등 최소화(연중)
- (분석력 향상) 정확한 세입관리를 위한 주기적(일별, 월별, 분기별) 관리 및 분석(매월)

2-2. 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 기반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2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 (다각적인 채권 확보) 재산조회(부동산·차량) 및 신용정보를 활용한 급여·직장 조회 등 신속한 채권 확보 강화(매월)

□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

- (맞춤형 운영 지원) 체납액 관리부서 담당자와 1:1 매칭 지원으로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방안 모색(2회)
- (역량강화) 세외수입 실무 및 시스템 교육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징수율 제고(상반기)
- (업무연찬 및 시상)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연찬회 개최(1회) 및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5개 시군)

3 전략적 징수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3-1. 체납액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고액체납자 적극적 징수활동

- (고액체납 집중관리) 체납징수 운영계획 수립,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 (지속적인 행정제재)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수입물품 통관제재 등 다양한 행정제재 추진

□ 다각적인 징수기법 운용

- (금융자산 일괄조회) 예금, 보험, 주식, 가상자산,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즉시 환가 가능한 금융자산 압류·추심 강화
- (징수기법 다각화) 법원공탁금, 리스보증금, 공제회부담금, 외국인 전용보험, 무체재산권(특허권·저작권)^{신규} 조회 등 징수기법 다각화
- (납세서비스 홍보)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서비스 홍보,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납세안내문(7개 언어) 제작·배포

3-2.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

□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 (정기 세무조사)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1천만원 이상 감면법인, 2개 이상 시·군 연관 대형법인 등 30여개 법인 선정 조사
- (취약분야 기획조사) 감면물건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 사용 등 탈세 취약부문 4개 분야* 선정 전수조사
* 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귀농인,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 탄력적 세무조사 운영

- (세무조사 유예) 재해·재난 피해업체 및 우수기업* 세무조사 유예
* 고용 및 노인일자리 창출, 중소기업대상 우수기업 등 세무조사 유예
- (민생경제 지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일정 기업 선택제 및 조사결과 조기결정 신청제 운영,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배부

4 균형있는 과세표준 산정과 납세자 권익 강화

4-1. 과세표준 산정의 신뢰도 제고 및 성실납세 기반 강화

□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향상

- (공정한 가격공시) 공정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로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차질없는 공시 추진(4월, 9월)
- (객관적인 시가표준액 결정) 실질적 가치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정기 및 수시)
 - 건축물 시가표준 산정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로 투명성 제고(2월)

□ 지방소득세 세수확보를 위한 성실납세 지원

- (납세편의 제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불편해소 및 납세자와의 소통창구(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신고도우미)운영 지원
- (다양한 홍보확대) 안내서 배포 및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홍보추진 (금융기관ATM기, 아파트승강기모니터 등)

4-2.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 내실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불복청구 지원 확대

- (지방세심의위원회)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연중)
 - 납세자 구술심의 원칙, 주심제도(전문검토위원회) 운영
 -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선정대리인(조세전문가, 3명) 제도 운영
- (불복청구 지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 작성요령 및 불복사유서 사례 홈페이지 게시 등 납세자 지원(연중)
- (조세심판 지원) 광범위한 사례 검토 및 법리 적용으로 공정성 제고(연중)

5. 도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여건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도정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자치입법 필요
- 행정서비스의 다변화로 도민의 권익 보호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권익구제 제도 운영 필요
-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지역의 미래를 품은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 필요
-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시의성 있는 다양한 정책통계 요구에 부응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무행정 추진**



이행과제

- 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
- ②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 및 적극적 소송수행**
- ③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규제개혁·도정혁신 추진**
- ④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

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

1-1.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체계 운영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 (법률상담) 일상생활 속 각종 법적인 문제에 대해 도민이 편리하게 변호사 등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 다양한 상담 창구(대면·전화·사이버·찾아가는 상담 등) 운영을 통해 도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접근성·편의성 제고 및 법률복지 증진
-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 주민의 직접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투표·감사·자치법규시스템 등 온라인서비스의 기능개선 지원

1-2.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 및 법무 역량 강화

□ 법령 정합성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 적극 지원

- (품질 제고) 완성도 높은 양질의 자치입법을 위해 도와 시·군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제심사 및 의견 적극 제시
- (신속 입법) 도정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고 법령 제·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수시 개최 등 입법절차 조속 진행
- (법규 정비)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치법규 지속 정비 병행

□ 법률 해석 및 집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 지원

- (교육지원)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법제처 협업)을 통해 도, 시·군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 배양 및 법령 이해도 제고

1-3. 공정한 소청심사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 운영을 통한 권익 구제

- (권익 구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법정기한 준수(60일) 및 심리사건 수요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②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 및 적극적 소송수행

2-1.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으로 권익구제 강화

□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심판 운영

- (기간 단축) 신속한 심리·재결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도민 권리구제 강화 및 분쟁 조기 해소
- (공정성 확보) 행정심판 심리 과정 및 재결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술심리 참가 기회 확대 및 현지 확인 강화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증진 및 권익보호 확대

- (편의 증진)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심판청구 편의 제공 및 최신 재결례, 청구서 작성사례 홈페이지 게시로 알권리 충족
- (권익 보호)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적극 지원 및 생계형 청구사건 집행정지 적극 검토

2-2.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행정질서 확립

□ 논리적·체계적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및 쟁송 최소화

- (적극대응) 쟁점사건의 논리적 대응으로 소송대응 효과성 제고 및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를 통한 소송대응 능력 향상
- (정보제공) 전자법률도서관(법령, 판례, 부처별 행정자료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법률 정보 활용 지원
- (법률자문) 고문변호사(7명)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정의 적법·신뢰성 제고

2-3.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창업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방세 감면 안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제도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3 도민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 규제개혁 · 도정책신 추진

3-1.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발굴 · 개선 및 일상적 적극행정 정착

- **규제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현장 중심 규제 발굴·개선**
 - (규제 정비) 자치법규 제 · 개정 시 사전심사로 불합리한 규제 선제적 예방,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정비 활성화
 - (규제 발굴 · 개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별 규제 발굴·개선
 -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기업(생업) 공모, 현장토론회, 발굴 보고회, 규제신고센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TF, 규제개혁협의체 운영
-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일상화**
 - (실행계획 수립 · 공유) ‘충청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전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위원회 정례 개최 및 의견제시제도 등 현안처리 기능 강화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3-2. 혁신의 일상화로 전방위적 도정책신 촉진

-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과제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 정부혁신 계획과 연계한 충북형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충청북도 혁신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
 - (수시 공모제안 추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제안을 추진하여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우수 아이디어 발굴
 - (공공자원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민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공유누리’ 및 연령별·주제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금24’ 운영
-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
 - (도정책신 연구모임 끌어올림 운영) 젊은 직원들로 이루어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혁신 성과도출 및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활동 전개
 - (혁신 워크숍 개최) 조직 구성원 상호간 이해·소통을 위한 워크숍 추진

4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

4-1.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경제통계 작성 및 제공

□ 「풍요로운 충북경제」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기초통계 조사

- (사업체조사) 도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
 - 도내 223,066개 사업체 대상, 9개 항목(연간매출액, 종사자수, 사업 종류 등)
- (광·제조업조사) 광제조업의 구조, 산업활동실태 등 파악
 - 도내 3,018개 광·제조업체 대상, 13개 항목(종사자수, 매출액, 재고액 등)

□ 지역경제 규모·성장을 진단하는 통계 작성 및 개발

- (시·군 지역내총생산) 시·군 경제 산업규모 분석을 위한 지역내총생산 작성
- (시·군 소득지표) 시·군 경제활동의 소득분배 상황 파악을 위한 지표
 - 법인, 개인, 정부부문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 140개 항목 / 시산 및 분석 완료('24 ~ '25)

4-2. 사회변화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및 데이터 제공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 (가구주택기초조사)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가구주택 기초정보 총조사
 - 도내 779천 세대, 11개 항목(건물내 거주여부, 거처종류, 빈집조사 등)
- (사회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사회변화 예측을 위한 사회조사 추진
 - 도내 11,616가구 만 15세 이상, 8개 분야 60여개 항목
- (주민등록인구) 등록인구 기반 인구추이, 연령 구조 등 분석
- (기본통계) 도정 17개 분야별 통계데이터 수집·생산 및 보고서 발간

□ 통계품질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

- (자체품질진단) 생산통계의 품질진단 강화로 이용자 신뢰도 향상
- (통계정보서비스)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데이터 활용성 증진
 - 통계보고서 8종, 통계DB, 통계 시각화 등 통계자료 통합 제공

V. 주요 현안사업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추진배경(필요성)

-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계협력과 확산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
- (농촌지역 살리기) 각종 교통망에서 소외,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
- (국가 신성장 동력) 첨단 산업(반도체, 바이오 등), 백두대간 및 호수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新 성장 동력으로 역할

□ 특별법 주요내용

- (국가 책무)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중부내륙지역이 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재정적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법안 발의('22. 12. 29. / 정우택 국회 부의장 등 28인)
- 국회 본회의 통과('23. 12.8.)
- 법안 제정·공포('23. 12.26.) * '24. 6. 27. 시행

□ 향후계획

- 타 유사 법령 및 타시도 특별법 제·개정 사례 분석 등 : '24.1.
- 개정입법 및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계획 수립 : '24.1~2.
- 특례 발굴 추진단 구성·운영 : '24.2.
- 중부내륙시도·연구원 TF협의체 구성 운영 등 시도 연계협력 강화

| | | | |
|-----|-------|-----|-----------------|
| 부서명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행정6급 안효숙 ☎ 2113 |
|-----|-------|-----|-----------------|

2. 2025 정부예산 확보 추진

□ 확보 목표액 : 8조 9,000억원

※ 전년도 확보액 : 8조 8,296억원

□ 최근 5년간 정부예산 확보실적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목표액 | 5조 5,000억원 | 6조 1,000억원 | 7조원 | 7조 8,000억원 | 8조 4,000억원 |
| 확보액 | 6조 854억원 | 6조 8,202억원 | 7조 6,703억원 | 8조 3,065억원 | 8조 8,296억원 |

□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1~5월) : 신규사업 발굴 및 부처별 예산(안) 반영
 - 부처별 예산(안) 작성 제출(각 부처→ 기획재정부, 5. 31일 恨)
- 2단계(6~8월) : 기재부 심사동향 파악 및 반영활동 총력 전개
 - 정부예산(안) 작성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9. 3일 恨)
- 3단계(9~12월) :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증액
 - 정부예산(안) 심의·의결(국회, 12. 2일 恨)

□ 향후계획

- 대규모 프로젝트 및 혁신성장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 철저한 사전절차(예타 선정 및 통과, 투자심사 등) 이행
- 기재부 등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발빠른 국비 확보활동 전개

| | | | | |
|-----|-------|-----|----------|--------|
| 부서명 | 예산담당관 | 담당자 | 행정6급 송성현 | ☎ 2232 |
|-----|-------|-----|----------|--------|

3. 출생률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시책 확대 추진

□ 추진배경

- 국가 출생아수 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출산육아수당 지급,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유일 출생아수 반등 성공
- 임신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통한 출생아수 반등세 지속 유지로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실현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필요

※ '23년 지표 : 출생신고 증가율 1.3%(전국평균 △7.7%), 3분기 합계출산율 0.86명(전국 3위)

□ 주요 확대시책

- ① 산모, 신생아의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 ② 분만취약지 등 군지역 임신부 안심출산을 위한 교통비 50만원 지원
- ③ 여성 가임력 보존사업 강화
 -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규모 확대 : '23년 10명 → '24년 30명, 200만원^{최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최대 2회·회차당 100만원 지원
- ④ 임신부 우대시책 확대
 - 인구감소지역 임신부 힐링 태교패키지 지원 : 300명, 40만원 지원
 - 임신부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우선민원창구 운영 등 우대정책 강화

□ 향후계획

- 임신부 예우 조례 공포·시행 : '24. 1월
 - 임신부 예우 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확산 지속 추진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도민 공감대 형성
 - 인구의 날(7월), 임신부의 날(10월) 기념행사
 - 인구정책 전문가 포럼, 도민 간담회 및 인식개선 교육강화 등

| | | | | |
|-----|-----------|-----|----------|--------|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담당자 | 행정6급 김기범 | ☎ 4762 |
|-----|-----------|-----|----------|--------|

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추진

□ 사업개요

① 기초지원계정

- 배분금액 : 464억
- 배분기준 :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평가등급 : '22~'23년 5등급(64~120억)에서 '24년 4등급(64억~144억)으로 변경

< 2024년 >

| 등급 | 자치단체 수(비율) | 배분금액(억) | 등급 | 자치단체 수(비율) | 배분금액(억) |
|----|------------|---------|----|------------|---------|
| S | 4(5%) | 144 | A | 14(15%) | 112 |
| B | 26(30%) | 80 | C | 45(50%) | 64 |

② 광역지원계정

- 배분금액 : 약 95.8억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액 제외
- 배분기준 :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 정액 배분
- '24년 투자방향 : 중앙부처 연계 사업 집중투자('24년 160억원 중 91.2억원)
 - 기재부·행안부 추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기금 출자(64.2억원)
 - 국토부 등 7개 부처 연계사업, '지역활력타운'에 기금 지원(25억원)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혁신 사업'에 기금 연계(2개 사업, 총 1억원)

□ 추진상황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기초) 투자계획 수립 '23. 1.~6.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기초) 투자계획 제출 '23. 6. 30.
- '24년 기금(기초지원계정) 투자계획 평가 '23. 7.~9.
* 서면검토(7.17.~8.4.) → 현장방문(8.8.~8.31.) → 대면평가(9.1.~9.14.) → 종합평가(9.21.~9.26.)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확정 및 배분 '23. 10.~12.

□ 향후계획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4. 1.~

| | | | |
|-----|-----------|-----|-----------------|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담당자 | 행정6급 장유미 ☎ 4782 |
|-----|-----------|-----|-----------------|

VI. 202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 임신·출산 지원분야

○ 주요내용

| 사업명 | 주요내용 |
|-----------------------------------|---|
| ① 임신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 | ▶ 도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지원 |
| ② 군 지역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규} | ▶ 대중교통이 불편한 군 지역 임신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비 50만원 지원 ※ 산전검사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최대 10회 지원 |
| ③ 맘(Mom)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신규} | ▶ 인구감소지역 임신부 대상으로 태교를 위한 도내 숙박시설(리조트) 힐링 패키지 제공 (40만원 상당) |
| ④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총 2회, 회차당 최대 100만원) |
| ⑤ 출산육아수당 지원 ^{변경} | ▶ 출산육아가정에 출생아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4년 이후 출생아부터 1세 연령 도래시 수당 지급 ※ (종전) 0세부터 지급, (변경사유) 정부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조정 |
| ⑥ 첫만남이용권 지원 ^{변경} | ▶ 아동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년 이후 둘째아 이상 100만원 추가 지원(300만원) |

○ 기대효과

-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확대를 통해 지난해 출산육아수당 지급 등의 영향으로 반등한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증가 기대
- 임신 출산, 육아 가정에 대한 예우 및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지방세 분야

○ 주요내용

| 사업명 | 주요내용 |
|---|---|
| ① 국내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목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 해외사업장 청산 후 동일업종 영위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조례 50%p), 재산세 75%(5년) 감면 |
| ② 회생절차 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대 | (목적) 채무 회생 기업 지원 등 경제 활성화 (기존) 회사정리절차 관련 등기·등록만 비과세(자본금 납입 등은 과세) (개정) 회생기업 관련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
| ③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3년 연장 | (목적)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 (내용) 과표구간별 세율 0.05%p씩 인하 연장 (~'26년까지, 기존 0.1~0.4% → 개정 0.05~0.35%) |
| ④ 출산가구 12억원이하 주택 취득시 5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신설 | (목적)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 (내용) 출산전 1년, 출산후 5년내 거주목적 1주택 (12억이하) 취득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
| 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명사고 유족 지방세 감면지원 법제화 | (목적) 사망한 해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면제 (내용)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감면대상으로 법제화 ※ 예시) 호우피해 유가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의회동의 절차 불필요 ⇒ 법제화 |
| ⑥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세액인 경우 본세·가산세 면제 확대 | (내용) 본세 면제 확대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2천원) 가산세 면제 확대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 상향(30→45만원) |

Ⅶ.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 질문의원 | 소 속 | 정책복지위원회 | 질문일자 | 2022. 9.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이상정 | 관리번호 | 403-01-01 403-01-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제목 | 현금성 복지공약 추진 (육아수당 월100만원 지급, 출산수당 1,000만원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요지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성 복지공약 중 육아수당과 출산수당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23년도 이후 출생아 ○ 사업량 : 7,452명 ※ 2022년 통계청 출생아수 기준 ○ 사업비 : 89,424백만원(도 35,769 시군 53,655) ('23~'26) ○ 사업내용 : '23년 이후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 지급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합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0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1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2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3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4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5세</th> <th style="text-align: center;">6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년 출생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4년이후 출생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p>□ 그간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23. 2. ○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 수립 '23. 4. ○ 출산육아수당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 4. ○ 출산육아수당 신청 및 지급 시행 '23. 5. ○ 출산육아수당 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23. 9.~'24. 1. ※ 출산육아수당 6,507명, 19,521백만원 지급 ('23. 11월말 기준)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수당 지급 관리 시스템 운영개시 '24. 1. ○ 출산육아수당 신청·지원 실적 집계 매월 ○ 수당지급 관련 제도지침 및 절차 개선 추진 필요시 | | | | 구분 | 합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23년 출생아 | 1,000 | 300 | 100 | 200 | 200 | 200 | | | '24년이후 출생아 | 1,000 | - | 100 | 200 | 200 | 200 | 200 | 100 |
| 구분 | 합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 | | | | | | | | | | | | | | | | | | | | | |
| '23년 출생아 | 1,000 | 300 | 100 | 200 | 200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년이후 출생아 | 1,000 | - | 100 | 200 | 200 | 200 | 200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220-4760) 팀장 박용식 (☎220-4761) 담당자 김정희(☎220-4764)

| | | | | |
|------|-----|---------|------|--------------|
| 질문의원 | 소 속 | 산업경제위원회 | 발언일자 | 2022. 9. 15. |
| | 성 명 | 김꽃임 | 관리번호 | 403-02-03 |

질문제목 시·군 청년희망센터 운영비 지원

소관부서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질문유지(제한사항) ○ 제천에 추진 중인 청년희망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청년희망센터 운영비(도비) 지원 현황

| 연 번 | 공 간 명 | 소재지 | 운영주체 | 운영비(도비) 지원여부 |
|-----|-----------------|--------------------|------|--------------|
| 1 | 충북청년희망센터 (광역센터) |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0 | 도 | ○ |
| 2 | 청년뜨락5959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9번길 59 | 청주시 | × |
| 3 | 청년꿈제작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 청주시 | × |
| 4 | 청년대로 |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37 | 음성군 | × |

□ 검토 결과

- 도내 11개 시·군 모두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기설립된 청년센터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도 재정 여건으로 시·군 센터에 대한 설치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어려움. 다만, 시·군 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

□ 지원실적

- 시·군 청년센터 및 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비 편성(35,000천원) '22. 12
-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 소통 간담회 용역 지원(5,000천원) '23. 6
- 청주시 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 교류 행사 지원(5,000천원) '23. 10.

□ 향후계획

- 시·군 청년센터 설립·운영 시 도내 청년을 위한 우수사업 발굴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청년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 협력

진 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220-4770) 팀장 박경인 (☎220-4771) 담당자 박효승 (☎220-4776)

| 질문의원 | 소 속 | 교육위원회 | 질문일자 | 2022. 9. 28.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김현문 | 관리번호 | 403-05-01 | | | | | | | | | | | | | | | | | | | | |
| 질문제목 | 충북도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질문요지 (제안사항) | ○충청북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방안 마련할 것 (신청 시·군, 읍면·동부터 확대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 □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현황(2024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운영시기 / 운영장소</th> <th>예산액 (천원)</th> <th>운영 방식</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td> <td>첫째·셋째주 월요일 / 도청 공감마당</td> <td>7,680</td> <td>대면· 전화</td> <td>서비스 확대 운영 (‘23년 ~)</td> </tr> <tr> <td>사이버 무료법률상담</td> <td>연중</td> <td>1,890</td> <td>사이버</td> <td></td> </tr> <tr> <td>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td> <td>연중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td> <td>4,400</td> <td>대면</td> <td>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td> </tr> </tbody> </table> | | | | 구 분 | 운영시기 / 운영장소 | 예산액 (천원) | 운영 방식 | 비고 |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 | 첫째·셋째주 월요일 / 도청 공감마당 | 7,680 | 대면· 전화 | 서비스 확대 운영 (‘23년 ~)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 연중 | 1,890 | 사이버 |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 연중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 | 4,400 | 대면 | 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 |
| | 구 분 | 운영시기 / 운영장소 | 예산액 (천원) | 운영 방식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 | 첫째·셋째주 월요일 / 도청 공감마당 | 7,680 | 대면· 전화 | 서비스 확대 운영 (‘23년 ~) | | | | | | | | | | | | | | | | | | | |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 연중 | 1,890 | 사이버 | | | | | | | | | | | | | | | | | | | | | |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 연중 /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 | 4,400 | 대면 | 시·군 수요 조사후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 추진 계획 수립 : '2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대면·전화 상담 확대 - 무료법률서비스 만족도 조사 후 개선 방안 도출 ○ 2023년 당초예산 사업비 요구 및 반영 : '22. 9. ~ 12. ○ 2023년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 수립 : '23. 1. ○ 충청북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실시 : '23.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전화) 202건, (사이버) 66건, (찾아가는) 9회·85건 / '23.12.31일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료법률상담(대면·전화, 사이버, 찾아가는) 운영 및 홍보 지속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 (☎220-2310) 팀장 한광덕 (☎220-2311) 담당자 이종희(☎220-2314)

VIII.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발언일자 | 2022. 7. 22. |
| | 성 명 | 박진희 | 관리번호 | 402-10-01 |
| 발언제목 | 김영환 도지사 공약파기 사과하라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공약 파기 철회와 함께 현실성 있는 공약이행 계획을 밝혀야 할 것 | | | |
| 추진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경기침체, 도세 증가율 급감 등 재정여건 악화로 선거 당시와 여건 변화 고려 ○ 국가 정책방향,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국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내실있도록 사업설계 □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유사성에 따라 국가지원사업*과 연계,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 추가 지원**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지원, 누리과정, 아동수당, 부모급여 **(출산육아수당) 첫째 300만원 지방비 지원, 매년 200만원씩 4년간 800만원 추가 지원 ○ 어르신 감사효도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 감사효도비 연 1회 10만원 지원 ※ 단계적 확대 검토 ○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제외기준 완화***로 수혜자 확대 ***2,900만원 이상→3,700만원 이상, 귀농인·연금수급자 등 기준 삭제 - 現 50만원 → `23년부터 60만원 지급 ※ 단계적 확대 검토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약별 사업 추진 : 공약사업 추진부서(청년정책담당관, 노인장애인과, 농업정책과) ○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관리 : 정책기획관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정책기획관 맹은영 (☎220-2300) 팀장 황병두 (☎220-2131) 담당자 정선미(☎220-2134)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발언일자 | 2022. 12. 16. |
| | 성 명 | 이동우 | 관리번호 | 405-08-01 |
| 발언제목 | 충청북도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도를 넘었다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 | |
| 발언요지 (제한사항) | ○ 집행부의 기강 해이와 의회 무시 형태 | | | |
| 추진상황 | <p>□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시 법정 절차 무시 및 도의원 배제 등 기강 해이 ○ 도의원 및 의회 경시(무례한 언사 등) <p>□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실·국·원·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공문 발송 : '22. 12. 21. - 제목 : 도의회 관련 대응 철저 요청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준수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조례 등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준수 ▶ 도의회 및 도의원 존중(답변·대응시 언행 주의 및 자료제출 적극 대응) ▶ 본회의, 상임위 등 출석요구 공무원 불출석 자제 (회기일정 참고하여 사전 일정 조정) *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 시, 사전 보고 </div>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실·국·원·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도의회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시 상기 준수사항 지속 당부 요청(수시)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정책기획관 맹은영 (☎220-2300) 팀장 오금년 (☎220-2141) 담당자 손성유 (☎220-2142)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발언일자 | 2023. 6. 23. |
| | 성 명 | 박지현 | 관리번호 | 409-04-03 |
| 발언제목 | 충북권역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에 대한 제언 (시멘트 업체에 대한 '자원순환세'도입)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 관련하여 폐기물 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멘트 업체에도 부과하도록 보완 필요 | | | |
| 추진상황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생산지역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소각 처리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피해 발생 ○ 지역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시설 등에 대한 <u>신규과세를 통해 외부 불경제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u> ○ <u>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멘트 생산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업체에게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한 과세안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중</u> *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회복을 위해 '23.1.31. 6개 시멘트 생산 지역(제천, 단양,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시장 군수로 구성된 협의회 ○ 현재, 도에서는 시멘트 생산업체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u>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대로 현재 국회 계류 중임</u> * 시멘트 업계에서 기금의 타당성을 주장, '21년부터 年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중 <p><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서 자원순환세 연구용역을 통해 <u>과세안 제안시, 중앙부처 건의 및 국회 대응 등 법제화 적극 지지</u>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세정담당관 이정노 (☎220-2750) 팀장 김윤미 (☎220-2751) 담당자 김남숙(☎220-2753)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발언일자 | 2023. 9. 6. |
| | 성 명 | 유재목 | 관리번호 | 411-01-01 411-01-02 411-01-03 |
| 발언제목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쓰이고 있는가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선정, 발굴 등과 관련하여 도의 주도적 역할강화 및 도-시군 사업 연계·협력 필요 | | | |
| 추진상황 | <p><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광역-기초 사업 간의 연계 강화 및 중앙부처 연계 사업 집중 투자 추진 등 도 역할 강화 <p><input type="checkbox"/>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광역기금, 중앙부처(국토부, 중기부 등) 연계 사업 집중투자 및 기초기금 연계 추진 ○ '24년 기초기금 계획수립 시 기금운용 기관(지방재정공제회)의 사전 컨설팅(2회) 및 사업계획서 기획 지원(사업 효율성, 지역여건 분석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기금 사업 발굴 시, 사업 목표 특정(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하여 광역 및 시군 연계사업 기획·추진 ○ 기초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관련 유관기관(지방재정공제회, 행안부 등) 사전 컨설팅 및 도 기획지원 ○ 부처 공모사업 관련, 여건 분석 등 사업 기획 지원 지속 추진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220-4760) 팀장 최연락 (☎220-4781) 담당자 장유미(☎220-4782)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행정문화위원회 | 발언일자 | 2023. 9. 19. |
| | 성 명 | 노금식 | 관리번호 | 411-10-01 |
| 발언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필요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 외국인노동자 포함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추진 | | | |
| 추진상황 | <p>□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11개 시군 ○ 사업량 : 연구용역 1식 ○ 사업비 : 8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석) 충청북도 외국인현황 및 지역 산업구조 분석 - (실태조사) 외국인의 유형별 실태조사 및 정책 수요 분석 - (정책제안) 충북형 외국인정책 모델 개발 및 중장기 정책 수립 <p>□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및 실태조사 용역 착수 '23. 7.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3. 7.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실시 '23. 7.~'23. 12.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용역결과 성과품 납품 '24. 1. ○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24. 상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석) 지역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적정 외국인 규모 파악 - (실태조사) 외국인 유형별 유입 및 거주 패턴 분석 → 지원사업 발굴 - (정책수립) 중장기 외국인정책(유입-정착-통합 모델) 기본계획 수립 </div>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220-4760) 팀장 이응란 (☎220-4791) 담당자 권오상(☎220-4793)

| 발언의원 | 소 속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발언일자 | 2023. 10.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 박지현 | 관리번호 | 412-01-0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언제목 |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은 지방보조금 운영 관행을 전면 개혁하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1차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력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 도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사업에 대한 동일한 보조사업자의 계약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재평가하는 방식 도입 검토 ○ 충청북도 차원의 “실효성있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방안”을 구축하여 연속적으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세부 지침 마련할 것. ○ 위법성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사업을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 <p>□ 보조금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2023년 충청북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년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액</td> <td>321</td> <td>366</td> <td>342</td> </tr> </tbody> </table> <p>□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부서 안내 ○ 동일사업에 동일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필요하여 제한은 어려움. ○ 보조사업 성과평가는 행안부예규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은 삭감 및 지원 중단하는 등 강화된 기준으로 기 관리하고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등 급</th> <th>매우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행안부예규</td> <td>90점이상</td> <td>89~80점</td> <td>79~60점</td> <td>59~50점</td> <td>50점미만</td> </tr> <tr> <td>충청북도</td> <td>90점이상</td> <td>89~80점</td> <td>79~70점</td> <td>69~60점</td> <td>60점미만</td> </tr> </tbody> </table>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 | | | | 년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예산액 | 321 | 366 | 342 | 등 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행안부예규 | 90점이상 | 89~80점 | 79~60점 | 59~50점 | 50점미만 | 충청북도 | 90점이상 | 89~80점 | 79~70점 | 69~60점 | 60점미만 |
| 년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액 | 321 | 366 | 3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안부예규 | 90점이상 | 89~80점 | 79~60점 | 59~50점 | 50점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90점이상 | 89~80점 | 79~70점 | 69~60점 | 60점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장 이승열 (☎220-2210) 팀장 이영주(☎220-2221) 담당자 김경희(☎220-2225)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산업경제위원회 | 발언일자 | 2023. 10. 12. |
| | 성 명 | 김꽃임 | 관리번호 | 402-02-01 |
| 발언제목 | 2024년 예산편성, 도민의 민생문제해결이 최우선입니다.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 것 ○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증액 △영세·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도민의 생활 및 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 등 충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 | | |
| 추진상황 | <p>□ 재정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정부의 재정기조 '건전재정 강화'로 전환, 고금리 지속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 (세출) 호우피해 복구,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p>□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당초예산 →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및 긴축재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재정사업 원점(Zero-Base) 재검토, 기본경비 10% 절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투자속도 조절 및 ^{외부}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 충당 - 도민안전,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편성 -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오차 최소화 노력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과장 이승열 (☎220-2210) 팀장 김홍순 (☎220-2211) 담당자 김은영 (☎220-2212)

| | | | | |
|----------------|--|-------|------|---------------|
| 발언의원 | 소 속 | 교육위원회 | 발언일자 | 2023. 10. 18. |
| | 성 명 | 김현문 | 관리번호 | 412-05-01 |
| 발언제목 | 훈민정음 창제정신 계승한 '충청북도 창의상·장인상'제정·시상하자! |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 | | |
| 발언요지 (제안사항) | ○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충청북도/충청북도 교육청 창의상과 장인상을 제정하여 시상해야 함 | | | |
| 추진상황 | <p>□ 추진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채택된 제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을 구분하여 시상함 <p>□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접수 총 278건^{수시252, 공모26} 중 채택 23건^{수시20, 공모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충청북도 제안 공모 : '23. 9. 4. ~ 9. 22.(3주간) ○ 우수제안 심사·시상 : 1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심사실무위원회(11.13.) → 국민투표(11.15. ~ 11.21.) → 도정조정위원회(12.21.)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 및 우수제안 시상 지속 추진 | | | |
| 진 도 | 완 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 | | | |

과장 허 정 (☎220-2310) 팀장 김동수 (☎220-2321) 담당자 이희정(☎220-2325)

IX.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 제 목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 | |
|---|---|-------|-----------|
| 채택일 | 제408회('23. 4. 19) | 관리번호 | 12대-408-1 |
| 소관상임위 | 행정문화위원회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 | |
| 건의(결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 | |
| 건의·결의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민들은 충북지역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사건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청주지방법원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은 2025년 가정법원이 설치되며, 지방법원 관할인구가 오히려 적은 울산에는 이미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었음. ○ 이에 충북도민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하여“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 | | |
| 관련현안 (문제) 사업 추진상황 및 도 대응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8.31. 이장섭 국회의원 등 11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2020. 9. 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0.11.18.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제382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 →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부 ○ 2022.12. 5. 상정, 축조심사[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 2023. 4.17.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도민 대토론회 개최 (충북지방변호사회) ○ 2023. 4.19.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송부(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 2023. 5.17.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이장섭 국회의원실, 충북지방변호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님 축사 전달(토론회 책자 수록용) - 충청북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 | | |
| 향후계획 (도의회 협조사항 등) | ○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지속 협조 | | |
| 진 도 | 완 료 | 추 진 중 | ○ |
|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2310) 팀장 태문걸(☎2331) 담당자 김관식(☎2332) | | | |

| | | | |
|---|---|------|-----------|
| 제 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 |
| 채택일 | 제411회('23. 9. 6) | 관리번호 | 12대-411-1 |
| 소관상임위 | 정책복지위원회 | | |
|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 |
| 건의(결의)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 | |
| 건의·결의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국회에 법안 발의되었으나 법안처리 지연 중 ○ 특별법 제정은 중부내륙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위로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 개최 등 법안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9월 중으로 반드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 | | |
| 관련현안 (문제) 사업 추진상황 및 도 대응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발의(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28인) : '22. 12. 29. ○ 입법예고 : '23. 1. 3. ~ 1. 17.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제1법안소위 회부) : '23. 2. 16. ○ 국회 행안위 법안제정 공청회 개최 : '23. 4. 19. ○ 시도지사협의회, 특별법 공동결의문 채택 : '23. 5. 9. ○ 민관정,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 '23. 5. 30. ○ 특별법 연내 제정 100만명 서명운동 추진 : '23. 6. ~ 8. * 1,075,599명 서명 참여(목표 대비 107.6%)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 '23. 11. 2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23.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 : '23. 12. 8. | | |
| 향후계획 (도의회 협조사항 등) |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 건의활동 지원 | | |
| 진 도 | 완 료 | ○ | 추 진 중 |
| 정책기획관 맹은영(☎2300) 팀장 조미애(☎2111) 담당자 안효숙(☎2113) | | | |